전북자치도, 군산시의원 주장 반박 나서

"새만금신항만, 무역항 지정 이전 단계"

"항만법 적용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 대상 해수부 법적 행정절차 추진시 자문 결과 반영"

지난 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열린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과의 사이에 벌어진 고성 등 소동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었다.

김 국장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이 "새만금 신항 문제는 군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지사는 신항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해명했다.

김 국장은 "새만금 신항은 전북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김 지사는 법적 권한이 있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무역항을 지정 결정하면 되는데 왜 도지사에게까지 문의하는지에 대한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영일 시의원은 김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이 발언한 항만법 제5조 제5항을 보면 분명히 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생기면 해수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입장을 내주게 되어 있다고 한 점에 대해 김 국장은 "항만법 제5조 제5항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 지정 조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 조항"이라고 밝히며,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항만 육성 기본 방향, 항만의 현황, 중·장기 개발계획, 항만의 관리·운영계획, 시설계획 등을 반영하며, 새만금 신항만은 무역항 지정 이전 단계로 항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역항 지정 절차는 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후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북자치도가 전문가 자문그룹 논의 결과를 은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안대로 해수부에 전달하도록 촉구하는 발언에 대해, 김 국장은 "새만금 신항만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내부적 자문단 회의를 3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청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 의견은 단지 자문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군산항 신하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단독항으로 할 것인지에 따른 행정절차 개시에 대비해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군산시와 김제시 간 주장이 상반돼 서로 새만금 신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 하에서 전북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두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전체를 전략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출범하고자 해수부에 전문가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해수부가 법적 행정절차 추진시 전문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기자 브리핑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 김관영 지사와 군산시 김영일 시의원 간에 일어난 고성 등 소동은 앞으로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기 시에서 운영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양 도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언론보도와 5일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어느 곳에 신항만을 두나 전북도의 자산인 만큼 서로 양보하여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을텐데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비명계 대선주자들, 이재명에 "상처받은 분들 끌어안아야"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등이 한 비판 정도는 받아내야"

김경수 전 지사 "상처받은 분들 끌어안지 않고 대선서 이기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내 통합 행보를 거듭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의 쓴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을 전부 다 한번 엮어 대표 주자가 돼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다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호소하는 것 만큼 안전한 대선 전략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김 전 지사가 한 얘기나 임 전 실장이 한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생명력이 무엇이었냐"며 "포용성과 다양성, 민주성 이런 것이지 않나.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전체적인 민주당 지지가 올라갈 것이니 그 다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는 "탄핵 상황인데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팽팽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라며 "내란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지금은 내전 상태다. 국민들이 정치적 내전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갈라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한다고 공격을 해대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사의 경험은 그랬다. 항상 더 많은 세력과 손을 잡는 측이 이겼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같은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냐"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 이 대표에게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 구체적 실천을 부탁드렸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실천의 한 예로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만 해 나가면 얼마든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분들이 꽤 많다"며 "지금 내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당내 공세에 대해선 "그로 인해 떠나가는 당원들이 있었던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나. 그런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탄소중립 실현… 도, 올해 산림정책 본격 추진

탄소흡수원 확대 ·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에 2364억 투입

도내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생활권 도시숲 · 정원 조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나무심기 · 숲 가꾸기 추진

대형화되는 산불 · 산사태 예방 위해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림정책 추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산림부서장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자원분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등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산림자원분야에 총 2,364억원을 투입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다양한 숲 확대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333억원 △산림자원 관리 639억원 △산림재해 대응 668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329억원 △생활 녹지공간 구축 395억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숲이 주는 혜택을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나무 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한, 최근 잦아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임차헬기(3대) 운영 및 산불 ICT 플랫폼 구축, 산불감시원(76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658명) 운영을 통해 연중 산불 예방·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42명) 운영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를 통한 확산 저지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52명) 운영, 드론·항공 예찰 병행으로 재선충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공공산후조리원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민주 박희승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산모의 수요는 높다.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희승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방중 시진핑 접견 가능성도

"양국 호혜 협력 강화 계엄 회복 노력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방문한다.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면담에 나서 양국간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한중 협력 증진을 비롯해 올해 10월 개최될 '2025 APEC 경주'의 성공적 개최 지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 및 관리,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해서도 대화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계엄 정국 이후 우리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전인대와의 의회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접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우 의장 중국 순방 관련, 시진핑 중국수석 면담은 현재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인대 초청에 따라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공식 오찬, 개막식 등에서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태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한다.

아울러 우 의장은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소재 항일 유적지 보존, 유해발굴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안중근기념관, 조린(자오린)공원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여 시설 개보수,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유해발굴 및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 민주당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동행한다. /뉴시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재가동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오는 6일 활동을 재개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조기 대선'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며 활동을 멈췄던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을 필두로 재가동하는 모습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연다.

발제를 맡은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전 한국벤처투자 CEO)은 '성장 우선'(Growth First)을 주제로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 공개된 발제문에서 주 소장은 △빅테크기업 △인공지능(AI) △K컬쳐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제조업 혁신과 연계된 안보 산업을 성장 동력(Growth Engine)으로 제시했다.

'분배와 공정'도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기본사회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 등 그가 보수화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 소장은 "성장과 분배·공정은 서로 보완적"이라며 "성장의 과실을 좋은 일자리의 증가, 균형발전, 그리고 복지재원 확충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